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4-다호
나우누리IDndakkgc 전화 253-8176 상담256-0092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시민감시국(금홍섭 시민감시국장, 253-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시내버스 감차(97년~99년 7월4일) 실태조사의 건

날 짜 / 2000년 1월 17일(월) 오전 10시

감차실태조사 결과 평균 % 감차확인

일부 주요노선의 경우, 많게는 %까지 감차

1. 그동안 감차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실태조사와 대전시 단속을 통해 일부 확인되었으나 시내버스회사의 극구부인으로 일관해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진운수의 97년부터 99년 7월까지의 감차자료와 한발여객의 감차자료를 실태분석한 결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에 이르는 감차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내버스는 정시성, 신속성, 쾌적성의 담보가 가장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모든 회사에서 감차를 단행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감차자료의 경우, 그동안 시내버스회사를 비롯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월 10일부터 대중교통감시단을 구성 시내버스 감차와 버스전용차로 실태조사 교통문화지수 등의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시내버스 감차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 시내버스의 현실

현재 대전

지난달 8일 전국버스연합회(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연합회)는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안으로 운임을 인상해주지 않으면 경영적자로 내년 1월로 예정된 노-사임금협상에 응할 수 없어 파업이 불가피 하다”고 밝힌 것은 시내버스가 공공성에 기초한 개별사업임을 망각한 것은 물론,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포기한채, 모든문제를 노조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횡포이다.

또한 버스연합회는 “내년 1월에 임금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파업이 시작돼도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서슴치않는 것은 현재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경영개선 미흡, 스스로의 자구책 미흡, 감차 및 편법운행, 중고버스 구매, 불친절, 수익금 불투명, 전근대적인 경영행태, 투명하지 않은 회사운영, 영세한 경영 등의 문제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서진운수(대전)가 1998년도부터 99년 5월까지 감차 자료를 대전시에 자진 신고한 것은 사측 스스로가 감차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시내버스업체의 불법행위를 확인케 하는 사례이다.

특히 연합회는 “파업사태가 발생하면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할 뿐 아니라 사업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 식의 시민의 발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고 본다.

현재 대중교통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시내버스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은 각시내버스 회사와 버스운송사업조합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1998년도 6월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것이나, 시내버스 감차에 대한 단속이 건수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으로 책정된 것, 그리고 2001년부터 시내버스 차량연수(현재 8년)가 폐지된 것 등은 바람직한 시내버스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이런 법적.제도적 개악에 근거한, 요금인상을 통해 경영채산성을 맞추려는 알뜰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연합회 차원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통한 쾌적성, 신속성, 정시성이 지켜지는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한 각 버스회사의 자중과 시내버스 종합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자치단체도 그동안 누차 지적되었던,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추종형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고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수정해서, 올바른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국버스연합회는 『대중교통』이 『대중고통』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무기삼아 일삼는 『요금인상』이라는 횡포는 지금이라도 당장 포

기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열망을 수렴해서라도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만약, 버스연합회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유도하거나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전국버스연합과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전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시내버스 정책과 버스업체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 촉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내버스가 활성화를 위해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중교통에 대한 감시단을 구성하고 감차문제와 대중교통정책 감시, 버스전용차로 감시 등의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 시내버스 감차실태

- 1) 서진운수 감차실태 분석
- 2) 한발여객 감차실태 분석

3. 시내버스 감차의 문제점

4. 개선방향